

‘대학 부도 사태’의 교훈

박 성 준

『시사저널』 사회탐 기자



마침내 대학이 무너졌다. 전임 교수가 5백 명에 이르고, 학부 학생수만 1만 7천 명이 넘는, 비교적 큰 규모의 종합대학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몰아닥친 IMF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3월 초 끝내 부도를 내고 말았다. ‘대학도 변해야 산다.’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올해 안으로 무너지는 대학이 반드시 한두 곳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은 너무도 일찍 적중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들도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문제의 대학은 서울 교정을 팔고 지방으로의 이전 작업을 서둘다가, 애초 팔려고 내놓았던 땅이 ‘퐁치 지구’에 걸린 사실이 뒤늦게 문체되어 매각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대학 부도의 일차 원인은, 이처럼 자기네가 팔려고 했던, 그리하여 새 교정을 짓는 데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려 했던 땅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된 불운에 있었다.

새 땅 주인은 그 곳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어 큰 돈을 벌어들일 계획이었다. 그 땅이 아파트 층수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퐁치 지구’에 묶여있음이 밝혀지자 새 땅 주인은 애초에 약속했던 매각 대금을 전액 지불하지는 못하겠다고 버티기 시작했다. 매각 대금 협상이 차질을 빚는 동안, 이 대학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백억 원대가 넘는 거액의 어음 사기 사건에도 휘말리게 됐다.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심각한 자금난이었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 이 대학은 교직원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 이 대학은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쫓기듯 서둘러 서울 교정을 내놓았는가. 이유는 단 하나, 수천억 원대의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땅의 매각은, 이 대학에게 빚도 갚고, 새 교정 건설 비용도 마련할 길을 터줄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학 당국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희망도 물거품이 됐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경쟁의 방향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들은 교육 개혁의 핵심이 되는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를 ‘양적 팽창’으로만 이루려고 했다. ‘남들이 의대를 하나까 우리도...’ ‘남들이 국제대학원을 신설하니 우리도...’ 비교를 하는 쪽이나, 비교를

당하는 쪽이나 기준은 늘 덩지와 규모였다.

대학 경쟁의 양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IMF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은 금융권과 재벌이 보여준 실패와 다를 바 없었다. 오죽하면 아직도 교육 일선에서 활약하는 한 대학 총장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쟁력이 없는 곳으로 '금융권과 교육계'를 지목하고 나섰을까.

대학 부도 사태를 맞아 교육계 안팎에서 '차입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대학들, 특히 사립대들은 한 해 두번씩 목돈으로 들어오는 학생 등록금이 없으면 도저히 정상 운영을 생각하지 못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이들 대학들이 양적 팽창을 위한 무한 경쟁에 나서게 됐다. 이 상황에서 빚을 지지 않을 대학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 있어 보인다. 대학들은 정작 중요한 구조 조정에는 탄성을 부려왔으며, 애써 끌여온 돈을 낭비했다. 대학이 뼈저리게 반성할 부분은 돈을 꾸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왜 돈을 꾸려했으며 꾸 돈은 어떤 식으로 썼는가 하는 데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시칫말이 있기는 하지만, 돈 없다는 사실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대학 당국자들은 부도 사태를 당하자 뒤늦게 이른바 '빅 딜'이 없었다느니, 구조 조정을 게을리했다느니 원인 진단을 내놓고 있다. 만시지탄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 당국은 할 말이 많을 터이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대학평가가 전면 실시되는 마당에 투자를 게을리했다가는 십중팔구 불이익을 받을 게 뻔했을 것이다. 교육 당국이 규제 일변도의 태도를 조금만 누그러뜨렸어도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 의대 신설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했다는 말인가. 대학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왜 또 운영하기 힘들다는 대학들을 기를 쓰고 신설해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했는가.

대학 부도 사태와 구조 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물어야 한다. 교수들은 기득권에만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학이 학부제를 통해 경쟁력이 없는 학과를 과감하게 정리 할라치면 해당 학과 교수들은 무조건 반발하는 모습만 보여주었다. 대학이 거품과 균살을 빼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학교를 백화점 식으로 운영하게 된 데에는, 대학 내부의 이들 '기득 세력'들이 대학 개혁에 완강하게 저항했던 탓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원인 분석이 없으면, 생산성 있는 결과도 기대할 수 없다. 대학 당국과 내부 구성원의 뼈저린 자기 반성이 없으면, 대학의 회생, 나아가 교육의 회생은 불가능해보인다. 바꿔 말하자면,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번 사태를 당하면서 대학인이 바로 이 점만이라도 확실하게 머리 속에 각인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